

석유정책방향의 새로운 모습

柳 志 喆

〈에너지경제연구원 계량분석 연구팀장〉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규모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크게 성장하여 왔다. 국내 총석유 수요가 1988년 이후 2배 이상 신장하여 작년에는 5억 배럴을 넘어섰고, 국내 정유업계의 연간 매출액도 13조원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를 국민 일인당으로 계산하면 30만원 정도이며, 1가구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가구당 120만원으로 근로자 한달 평균 월급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매출액인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석유시장은 소비 규모 세계 제10위, 수입규모 제6위를 기록하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수요의 경질화와 환경보전문제에 인하여 제품간의 수급불균형의 요인은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소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재원은 부족하고 가격구조를 통한 실질적인 투자재원의 조달과 투자효율의 개선은 어려운 여건이다. 시장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규제의 적정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개방화와 국제석유시장으로의 진출, 산업 및 유통구조의 개선, 기술 선진화, 위기 대응능력 제고, 경영합

리화 등의 제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에 비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석유수요의 증가추세가 건설한 산업성장 및 에너지 안보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수요관리정책과 유가 및 조세정책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현재 국내 석유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는 석유 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전체 더 나아가서 국민경제차원에서 그리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로서 해결해야할 정책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정책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감안되어야 할 것은 석유의존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에너지수급에 있어 구조적인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7년 43.7%를 기록하였던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는 1992년에 드디어 60%를 능가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에는 63%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구조가 불확실성이 심한 세계 석유시장으로부터 받는 지배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와 같은 석유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경제 측면에서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의 소비가 경제성장율을 상회하며 증가함에 따라 국민경제가 석유에 대하여 갖는 부담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유가가 상승할 경우 산업안보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수입은 1991년에 100억불 수준을 넘었고, 이는 총상품수입의 13%, 국민총생산의 4%에 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웃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 석유수입액이 국민총생산에 1-2% 수준 밖에 안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주변 경쟁대상국가들 보다 석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유소비절약과 이용효율의 향상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며, 석유대체에 너지의 이용 확대 또한 이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시장구조적인 접근의 보완과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석유소비절약의 정책노력을 강화하며, 정유업계 또한 기업의 「규모의 경제」를 살려 에너지절약 기업으로의 진출 등을 도모하는 등의 석유소비절약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고급연료로의 전환, 자동차와 같은 이용기기 보급의 확산, 석유화학업종과 같은 성장기반산업의 확충 등으로 인하여 석유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수요증가의 속도는 경제규모에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수요증가의 동태적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가격정책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을 넘어서 소비자의 구매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었던 지난 수년 동안 정부는 산업경쟁력 보호라는 이유로 저유가정책을 유지하여 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석유수요증가를 가속화 시켜왔던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석유가격에 대한 간섭은 석유사업기금 징수, 특소세 조정, 정유사의 이윤 통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취하여 온 저유가 정책의 요건은 특소세의 하향조정과 정유사의 이윤 통제를 통하여 나타나 왔고, 지난해 6월 정부는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석유류

제품의 특소세율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유사 이윤에 대한 간섭의 폭을 줄이고자하는 의미에서 일부 석유류 제품에 대한 가격자유화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용기기의 내구성과 소비행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특소세율의 상향조정을 통한 유가상승이 소비절약에 대하여 갖는 실효성은 단기적으로는 유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에 대한 조세제도 운영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바람직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고 제품간 배분의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유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 및 주차시설 등과 같은 공공재에 대한 투자비용과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등의 외부효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이 석유제품가격에 내부화되어 반영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도시화율과 인구밀도가 높은 여건 하에서는 공공재의 투자비용과 석유이용에 따른 외부효과의 사회적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들이 석유류 제품 관련 조세에 반영되어야 바람직하다.

국내 석유수급구조가 국제 석유시장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으로 단혀 있지 않도록 석유사업기금운용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석유사업기금의 용도중에서 국내 유가완충기능은 과감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해외석유시장의 유가의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신호(Signal)를 소비자로부터 차단하여 소비절약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국내 유가의 유지로 인하여 탄력적인 수요관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석유시장의 위기적응 순발력의 감퇴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석유사업기금의 위기관리 능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적 비축부문에 보다 많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의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는 석유산업이 독과점 성격을 지님에 따라 이에 따른 '시장의 실패'를 방지한다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가격관리 측면에서 정유사의 이윤통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산업조직 측면에서는 새로운 진입의 규제와 정유사의 수직통합에 대한 규제 등을 실

시하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 정부는 국내 석유산업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숙된 시장 메카니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점진적인 가격자유화와 유통부문의 규제합리화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향후 이 부문에서 더 많은 정책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 통하여 정부 간섭의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의 정유사 이윤에 대한 통제는 결과적으로 투자재원조달 부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논리로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또한 이윤의 통제는 투자재원부족 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를 통한 이윤 창출의 동기 저하, 정유사간의 경쟁 둔화에 따른 소비자 잉여 감소, 국제 경쟁력 감퇴 등을 야기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도 비판 받을 수 있다. 정유사의 투자소요의 증대가 정제설비의 증설, 중질유 분해시설 투자, 탈황 등 환경투자, 비축설비확대, 해외자원개발, 기술개발 투자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투자재원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도모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최근 국내 석유류 수요형태가 점차 경질화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여건하에서 중질유분해 및 탈황설비 투자의 지연은 중질유와 고유황유의 생산을 비대화시키고 있는 반면 저유황유와 경질유제품의 수입을 증대시킴에 따라 석유수급 구조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국내 소요 적정규모 이상의 원유수입을 야기하여 에너지 절약노력에도 역행하며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중질유 제품은 유연탄 등으로의 대체 잠재량이 많은 석유제품임에 따라 중질유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질유로 전환하는 중질유분해시설의 확충 등 정제

시설의 고도화에 대한 투자는 석유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 및 석유의존도의 감축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독과점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인 만큼, 규제의 완화가 시장의 실패를 다시금 초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규제의 강화는 또 다시 불가피하여진다. 석유제품가격이 전면 자유화되고 산업조직에 대한 규제가 축소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정유사는 가격 결정능력의 제고와 경영합리화, 정유사간의 정당한 경쟁능력 배양 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으로 부터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석유산업은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신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조만간 있을 UR 타결에 따른 국내석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영합리화와 소비자보호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중인 OECD 가입이 1990년대 중반에 실현될 경우 수반될 세계에너지기구(OECD/IEA)의 의무조항 준수에도 대비하여 할 시점이다. 화석연료인 석유를 다루는 석유산업이 현재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산성비 등의 환경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제품 및 기술개발, 투자증대, 탄소세 도입 등,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적 움직임과 국내에서의 노력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통일에도 대비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국내석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종합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 신간 ■

1992년판

石油年報

- 대한석유협회 기획부 -

新石油政策 제언



李 彰 圭
〈油公 석유사업부 과장〉

1. 머리말

우리는 역사상 가장 공정했던 선거를 통해 문민대통령을 탄생시켰다. 더우기 金泳三대통령 당선자는 「新經濟 구축을 통한 新韓國의 창조」를 역설하고 있으며, 이같은 비전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새정부의 진용을 정비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석유산업도 제3공화국의 태동과 더불어 탄생되었으며, 그 이후 30여년간 산업의 혈맥으로서 국민경제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석유정책은 독자적인 하나의 영역을 고수하기 어려웠으며, 타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지원하는데 1차적 소명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석유정책은 산업·민생정책, 재정·물가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의 경제발전을 통해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몇개 산업에서는 세계 일류권의 기업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분야 기업은 세계일류기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은 이웃 日本과 유사한 상황으로 거의 모든 업종의 상위랭킹에 日本기업이 많이 포진하고 있지만, 석유분야에서는 세계 30대 기업중에도 日本석유기업은 하나도 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非産油國이라는 韓·日 양국의 공통적 특성에 대부분 기인하고 있지만, 석유산업을 타산업에 대한 지원산업으로 분류하여 타산업발전을 위해 석유산업의 발전을 희생시킨 「정책의 실패」에도 다소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봉건시대에 있어 國富의 척도가 농업생산력의 핵심인 人口와 금붙이 등 原始的 資本축적수준 이었다면,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 國富의 척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축적수준 이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없다. 이에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석유산업의 세계일류산업 진입」이라는 관점에서 신석유정책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2. 석유산업의 성장과정과 과거 석유정책의 회고와 반성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정부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행하면서 정유공장의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여, 1964년 4월 大韓石油公社(現 油公)의 日産 35천배럴 정유공장이 상업가동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석유산업의 역사를 석유산업의 성장·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60년대의 국영기업시대, 70년대 외국메이저의 국내석유산업지배시대 그리고 80년대 이후의 민간기업시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60년대는 국영기업인 大韓石油公社의 독점시대로 이때는 경영성장과정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석유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충에 석유정책의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국내석유소비 규모는 연평균 48%라는 기록적인 신장율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1963년에 국내에너지 사용량중 10%에 불과했던 석유소비는 1969년에는 39%로 높아져 처음으로 석탄을 누르고 국내에너지원중 가장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그후 계속 선두의 위치를 고수하게 되었다. 이같은 석유소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大韓石油公社의 설비능력도 1964년 35천B/D에서 1969년에는 115천B/D로 3배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의 에너지정책은 이른바 「主炭從油」와 「主油從炭」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의 혈맥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였으며, 全無의 상태에서 석유산업을 탄생시켜 기술자립의 기반을 축적한 점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70년대는 외국의 석유 메이저 기업이 국내석유산업을 지배한 시대였다. 美國의 *Caltex*와 合作한 湖

南精油가 69년 4월 가동개시되고, 大韓石油公社도 나프타분해공장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70년 6월 美國의 걸프社에 경영권을 넘겨주었으며, 美國의 *Union Oil*과 合作한 경인에너지도 '71년 5월 공장가동을 개시함에 따라 60년대 말 極東精油에 이미 진출해 있던 *Royal Dutch Shell*과 함께 國內精油 4社는 모두 미국 및 유럽의 石油메이저에 의해 경영되게 되었다.

이들은 80년대 초반 한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약 10년간 원유의 공급, 석유제품의 生産 및 판매를 모두 장악하여 국내에너지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외국메이저는 국내석유산업에 기술을 전수하고 70년대에 있었던 2번의 석유파동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준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국내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보다는 본국에의 배당송금을 추구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었다.

이에 따라 70년대의 석유정책은 外國메이저의 횡포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1970년 1월 정부는 석유사업법을 제정·공포하여 석유산업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개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산업에 대한 직·간접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때에 만들어진 각종규제 때문에 석유산업의 경영은 전적으로 정부에 예속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 영향은 아직까지도 석유산업의 경영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유회사를 외국 메이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유통업 만큼은 민족자본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박한 발상에 따라 메이커의 유통단계 진출을 직·간접으로 규제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메이커가 유통단계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갖지 못하는 독특한 석유유통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은 메이저의 세계석유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크게 약화시킴과 동시에 국내석유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으로써, '80년대초반 외국메이저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80년 8월 *Gulf*가 油公에서, '83년말 *Union*이 京仁에너지에서 철수하였으며, '86년에는 *Caltex*가 湖南精油의 경영권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70년대 말 이미 極東에서 철수한 *R. D. Shell*과 함께 국내에 진출해 있던 메이저들이 모두 철수하고, 국내석유산업의 민간기업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국내석유산업을 지배하여 석유정책을 좌지우지하던 메이저가 철수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자주적인 석유정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80년대 석유정책의 첫번째 과제는 그동안 메이저가 공급해오던 원유의 안정적 확보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원유를 확보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원유도입선 다변화 시책도 꾸준히 펼쳐나갔다. 또한 석유사업기금제도를 만들어 석유비축사업 및 석유개발사업을 전개하여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80년대에는 제2차 석유위기 및 국내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석유수요가 거의 정체되어 석유업계는 시설과잉 및 과당경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으나, 메이저의 도움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석유산업을 국내의 경영능력과 기술로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80년대에 출범한 5.6공화국이 각각 「규제의 완화 및 자율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창의성 제고」를 공약하였지만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미흡하여 아직도 석유산업의 경영이 정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은 「玉의 티」라고 할 수 있다.

3. 석유산업의 향후 경영환경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었던 二元的 냉전구조가 와해되고 多元的 국제질서로 재편중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 중심의 국제관계가 정착되고 EC, NAFTA 등 지역별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U/R협상에 의해 보호주의가 퇴조하고 소련, 동구권의 개방에 따라 자원, 자본, 기술이동이 활발해지는 등 경제 및 기업경영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21세기에는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시장은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화석에너지 소비규제강화로 석유의존도는 서서히 감소하는 대신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新·再生 에너지의 상업화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0~30년간은 석유가 주종에너지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석유수요는 선진국은 정체되는 반면 개발도

상국은 경제개발로 높은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수요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측면에서는 非OPEC국가의 생산이 한계에 달하여 OPEC(석유수출국가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은 상승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中東지역에서의 분쟁발생이나, 舊 소련의 정정불안등으로 가격 급등할 소지도 있다.

국내의 경우 문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통일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21세기초에 세계 8강권의 선진국 진입이 기대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서 국내경제도 급격히 자율화·개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우기 현재 진행중인 U/R협상의 결과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석유산업에도 외국석유회사의 진출이 예상된다.

이같이 경제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석유 및 에너지 수요는 당분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90년대 중반이후 에너지 수요의 포화상태 접근으로 수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21세기초에는 년 1~2%밖에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국제적인 지구환경협약은 에너지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이전 수준으로 동결토록 추진되고 있으므로, 경제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규모의 확보와 국제적인 환경규제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것이 향후 석유 및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새정부의 정책과제

이와 같이 석유산업의 향후 경영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석유산업이 계속 성장·발전하고 국민경제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첫번째 정책과제는 에너지정책의 기초를 그동안 공급관리위주 정책에서 수요관리위주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초는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그 포인트를 두고 공급부문에 치중한 정책을 펴왔다. 즉 석유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될 경우 수요조정정책을 펴기 보다는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 및 유통설비를 우선 확충토록 하며, 더우기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정책, 석유비축, 석유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해온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또한 80년대 중반이래 지속되어온 低油價政策, 국제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국내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석유사업기금제도 등도 공급위주정책의 산물이다.

이같은 공급위주정책은 과거의 석유파동과 같은 국제시장의 위기를 정부주도하에 무난히 극복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년대에는 적합한 정책이었으나, 경제규모가 커진 현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80년대 중반이래 계속된 석유사업기금제도에 의한 유가완충과 低油價政策은 국제석유시장의 시황변동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국내소비자의 환경적응력을 무력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웃도는 이른바 에너지 과소비현상이 최근 몇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에너지 원단위가 오히려 증가하여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증가를 적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에너지가격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합리화 사업도 구체적이고 현실적 유인이 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일각에서 에너지정책기조의 수요관리위주 정책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되며, 이같은 정책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 부서에 가격정책, 조세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권한이 책임과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부의 두번째 정책과제는 그동안 공급관리위주정책 하에서 공급부문에 집중되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화하는 것이다. 지난 70년 석유사업법 제정이래 정부는 원유의 도입에서부터 정제, 판매에 이르는 석유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 대해 규제

를 실시해왔다. 수출입규제, 설비인·허가제도, 가격규제 및 유통망규제가 그 주요내용으로 80년대 이후 일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석유산업의 경영활동은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속성에는 보호와 통제의 양면성이 있으나, 우리의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모두 규제의 효율보다는 규제의 비효율, 부작용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조정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를 자율화하여 시장기능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정부의 기능은 공정한 물에 의하여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민간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는 앞서 언급한 수요관리위주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정책과제는 국제적인 지구환경규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이다. 현재 국제간에 협의중인 지구환경규제중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2000년의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규모는 1990년의 1.9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은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에너지 소비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이 감안되도록 국제간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규모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지구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앞에서 언급한 수요관리위주의 정책과 자율화에 의한 시장기능의 회복이 될 것이다.

새정부의 네번째 정책과제는 국제화·개방화에 대한 대비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南北통일 및 외국

석유자본의 국내진출이 예상되고 있는 바, 앞으로 국제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남북통일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석탄을 위주로 하는 北의 에너지소비구조와 석유를 위주로 한 南의 에너지소비구조가 통합이후에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보유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자원은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中國 및 시베리아지역에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공동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입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구상은 남북의 통합과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자의 위치를 한 에너지원에 계속 특화시키기 보다는 에너지원을 통합 공급하는 대형공급자로 육성하는 방안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국경이 없는 경쟁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일류가 되는 길밖에 없으며 次善의 선택은 공멸의 길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새정부에 맡겨져 있다. 세계 초강국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二流에너지 산업밖에 갖고 있지 못한 日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

건강관리

유방암, 극복

남자도 유방암 걸릴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에게서 발견되는 암 중 10% 정도를 유방암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빈도가 더 높아 10명 중 1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한다.

유방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에게만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다소 잘못된 것이다. 남자에게도 유방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그 발병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남자에게 발병되는 경우는 흔히 노인에게 발견되고 여자의 1/100 정도의 확률로 발병한다.

혼자서 걱정할 병 아니라 의학적 접근으로 대처해야

흔히 유방암의 주된 치료인 수술을 하는 방법도 날로 개선되어 가능한 적게 절제하여 미적 요소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전신 전이의 경우에 듣는 항암제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유방암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있어 가장 의학적인 접근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 가능한 암세포의 수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역시 조기진단, 조기발견이다. 그러므로 앞에 소개한 자가진단을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 실시하여 암의 뿌리를 조기에 찾아내고 조치하는 방법은 유방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과 같은 전문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진단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은 진단결과 유방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일지라도 그 이상이 모두 암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유방암의 경우도 일반상황과 마찬가지로 악성보다는 양성종양쪽이 훨씬 많으므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혼자만의 진단이 아닌 의학적 진단으로써 대처해야 할 것이다. 유방암은 결코 숨기거나 혼자서 걱정할 병이 아닌 것이다.